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방향

| 김 세 중 |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sjkim@kosbi.re.kr)

❖ 최근 중소기업 경기 동향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부문의 전이되면서 중소기업 실물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경기불황에 대비하여 생산을 축소하고 있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중소기업 실물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2008년 10월 중소기업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2.6%를 기록하여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9%를 기록하여 5개월 연속 70%를 하회하고 있는데, 중기업(74.2%) 보다는 소기업(66.6%)이,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70.5%) 보다는 경공업(67.1%)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경기둔화에 따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자금조달사정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11월 중소제조업 건강도지수(SBHI)¹⁾ 실적치는 63.7을 기록하여 전월(73.4)에 비해 9.7p 하락하였으며, 12월 전망치 역시 전월(79.6)보다 크게 하락한 65.0을 기록하였다. 특히 공장가동률이 80%이상인 정상 가동업체 비율은 2007년 9월 42.2%에서 2008년 9월 36.2%로 하락하였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경기불황에 대비하여 생산축소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1. 정상 가동업체 비율추이

단위: %

'07. 9월	'08. 5월	6월	7월	8월	9월
42.2	40.3	37.5	38.4	37.6	36.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는 고용부문의라 할 수 있다. 2008년 11월 중 실업률은 3.1%를 기록하여 3% 초반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

1) 매월 중소제조업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종사자수 5~299인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판매 등 7개 항목을 조사하며, SBHI가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로 해석.

고 있으나, 취업자수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2008년 11월 중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7만 명 증가에 그쳐 전월(9.7만 명)에 이어 10만 명을 하회하는 증가세가 지속되어 고용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을 보면, 제조업 -5.6만 명, 건설업 -2.9만 명, 도소매·음식숙박업 -7.9만 명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 및 30~39세가 각각 -13.3만 명 및 -13.2만 명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청년층의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고용부문이 타격을 받아 취업자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음

2008년 11월 중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전월과 동일한 2.6조 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금융당국의 국내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중소기업 신용리스크로 인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표 2>에서 보듯이, 2008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대기업 대출은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한 대출증가 규모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의 제조업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가 2008년 8월 76에서 11월 61로 악화되었으며 비제조업 중소기업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중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321개로 전월(203개) 보다 118개가 증가하여 2005년 3월 359개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2. 은행의 대·중소기업 대출 증감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06	2007		2008					'08. 11월 말 잔액
	연간	연간	11월	1~11월	8월	9월	10월	11월	
기업대출	42.2	73.5	10.2	75.1	3.9	5.0	7.3	3.5	466.3
(대기업)	-1.3	8.3	1.6	26.3	2.1	3.2	4.8	0.9	62.2
(중소기업)	43.5	65.1	8.6	48.8	1.8	1.9	2.6	2.6	404.1

자료: 한국은행.

이처럼 2008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너질 경우, 고용시장의 충격, 부품·소재산업의 와해 등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지금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8년 11월 1,454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해 경기 및 경영환경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10명 중 8명(84.8%)이 내년 국내 경제전망을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3명 중 1명(33.3%)은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정부가 총 14회에 중소기업금융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7년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2008년 상반기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를 제대로 조정 받지 못했음

현재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여건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문제, 둘째, 원-달러환율 상승에 따른 KIKO 문제²⁾, 셋째, 금융위기의 국내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먼저 2007년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2008년 상반기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³⁾.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를 제대로 조정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8년 4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월과 비교하여 2008년 1월 현재 원자재 가격은 제조업 평균 3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은 같은 기간 9.2% 조정에 그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 원자재 가격 및 납품단가 추이

구 분	비교시점(2005.1=100)			
	'05. 1	'06. 1	'07. 1	'08. 1
원자재 가격 추이	100	111.7	121.0	132.5
납품단가 추이	100	103.9	107.8	109.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2) 통화옵션거래의 한 방식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로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환율이 상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은 지정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다. 또한 환율이 지정된 범위 이하로 내려가도 계약이 무효(Knock out Barrier)가 되어서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게 된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해 지정환율 상단(Knock in Barrier)을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환율 급등 시에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3)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WTI유는 지난 12월 12일 배럴당 46.3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7월 3일(145.3\$/bbl) 최고가에 비해 3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부족, 원유재고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2008년 9월 이후 외화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통화옵션 상품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말 현재, 수출 중소기업의 KIKO 피해 규모는 447개 기업, 2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2008년 6월말 1조 1천억 원 수준이던 중소기업의 KIKO 손실은 10월말 2조 3천억 원(실현 손실 1조 2백만 원, 평가손실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이고 IT나 부품소재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키코에 가입한 것 자체가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일부 기업은 부도사태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원-엔 환율이 급등하면서 엔화대출을 이용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보고 있다. 과거 원-엔 환율이 강세를 보일 때 엔화대출을 이용한 중소기업 및 일부 자영업자들이 원화가치의 약세에 따라 피해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로 파급되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 교역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 금융경색으로 인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차질로 투자 및 고용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국의 경기침체로 수출 둔화, 이에 따른 생산 감소, 내수둔화, 기업매출 감소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사정 악화에 따른 금융경색이 장기화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통화옵션 상품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이 파급되고 있으며, 전세계 교역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MF 외환위기 상황과의 비교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변동성의 급등 및 외환보유고의 급감 형태로 나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은 서로 비슷한 듯 보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양자는 근본적으로 위기의 근원지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국지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2008년 금융위기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위험권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1997년 당시에는 선진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실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선진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어 수출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

하는 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2008년 현재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실물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재정투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들의 부도여파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2008년 10월과 11월 신규 일자리 창출이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고용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1997년과 2008년 모두 외환유동성 부족과 그로 인한 금융경색이 발생함에 따라 실물경기 침체가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의 2%대에서 급증하여 1998년 2월 6.1%(127만 명), 5월 6.9%(151만 명)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 처음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 2.5%를 기록하였다. 2008년 고용시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2008년 10월과 11월 신규 일자리 창출이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고용시장의 악화를 예견할 수 있다.

표4. 고용지표 추이

구분	1998.2	1998.5	2008.9	2008.11
실업률(%)	6.1	6.9	2.7	2.8
실업자(만 명)	127	151	67	70

자료: 통계청.

경제위기 이후 1998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인식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에 관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금 등 자원배분의 우선이 주어졌으나, 정부주도에 따른 시장기능의 왜곡과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강조한 나머지 시장수급의 균형, 작전세력의 차단, 투명성의 향상, 수익구조의 개선 등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부족하였다.

표5. 연도별 벤처기업 수 추이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벤처기업수	2,042	4,394	8,798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은 <표 5>와 같이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수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은 기술창업 촉진, 스톡옵션 등으로 석·박사 이공계 인력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대기업 부문의 고용이 107만 명 감소한데 비해 벤처기업을 통해 약 2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률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고용시장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2의 벤처 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0년 초반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벤처기업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두 차례에 걸친 벤처활성화대책(2004년 12월, 2005년 6월)과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일자리 창출 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캐피털, 벤처기업, 회수시장이 투자와 성장·회수라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경제위기 당시 대량실업을 극복한 벤처정신을 되살려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명품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경제위기 당시의 벤처정신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혁신과 성장을 담보할 이른바 '명품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야 함

❖ 중소기업 정책 방향

Ⅰ 금융시장 안정

단기적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9년도 중소기업 금융여건은 2008년도에 비해 다소 경색될 전망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태도가 현재보다는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경기둔화 등에 따른 매출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부족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은행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회수나 대출억제는 은행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며 은행들은 무분별한 대출회수와 대출억제를 지양해야 함

다음 <표 6>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8년 3/4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의 대출태도 지수⁴⁾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세는 2008년 3/4분기 중 대폭

4) 대출행태지수는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단을 5개 응답항목(크게 완화(증가), 다소 완화(증가), 변화없음, 다소 강화(감소), 크게 강화(감소))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로 기준치는 0이며 100과 -100 사이에 분포한다.

높아졌으며 4/4분기 이후에도 경기둔화 지속 등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2009년에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총 14차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중소기업 금융여건은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6.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추이 및 전망

구분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e)
총 합	18	16	8	8	3	-1	-3	-19	-11	-13	-22	-27
중소기업	32	31	16	22	25	13	-13	-28	-22	-22	-34	-41
가계주택	-3	-3	-6	-9	-41	-25	-3	-13	-6	-6	-6	-9
가계일반	3	3	-3	3	9	3	3	-3	-3	-3	-13	-13
대 기업	12	19	3	6	0	0	-3	-13	-6	-13	-19	-28

자료: 한국은행.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환위기 당시 고용불안을 벤처기업 활성화로 극복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설법인 수가 2008년 8월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주로 건설업을 비롯한 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은 국민경제에의 기여, 고용창출, 국가경쟁력의 제고, 사회 안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실한 중소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창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신생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이 창업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대행서비스에 대한 지원강화,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화, 예비창업자 양성 및 청년창업 저변 확충,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등을 우선적으로 내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창업대행서비스에 대한 지원강화,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화, 예비창업자 양성 및 청년창업 저변 확충,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등을 우선적으로 내실화하여야 함

| 기술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

200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만이 세계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제의 질적 고도화 및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므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양성과 저변확대는 국가경제 성장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의 공급능력도 확장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순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생적 노력이 필수이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기술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 확충을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적극 발굴 및 육성, 기술평가와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과 연계 강화,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수요연계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지원, ③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공정혁신 추진 지원, 경영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활동 강화,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 활용 현장애로 기술지원, ④ 중소기업 IT화 및 e-Biz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화 선도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IT화 경영여건 조성,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수출지원 대책 |

현재는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외화 유동성 부족사태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안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서비스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환율변동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무역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역설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엔화 강세가 지속되어 있어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적절한 무역금융을 지원해 줄 수 있는냐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타개하는 확실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양성과 저변 확대는 국가경제 성장의 중요한 목표이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각종 정책,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함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타개하는 확실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 대책 |

2009년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를 들 수 있다. 일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2009년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내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될 경우, 그 피해는 경기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내수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민감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이 급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한 건설업의 경우, 중견 건설업체가 부도위험에 몰리는 등 일부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건설업 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도 국내외 경기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용보증기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들 분야는 규모의 영세성, 잦은 창업과 퇴출의 반복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전환(예를 들어 프랜차이즈화)과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훈련체제의 도입 등이 절실하다.

2009년도 국내외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신용보증기관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최근 우리 산업현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대외약재에 대한 합리적 고통분담의 원칙을 정립하고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날선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둔화가 심화될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대외약재를 두고 자구노력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하기 보다는 거래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2009년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수록 거래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일탈행위는 자제되어야

대기업의 경쟁력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재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및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한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평범한 경영 원리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예를 들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가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산업 현장의 새로운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